

[행정학]

해설 위원: 김 철 교수

[총평]

2024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학 기본이론 내용을 골고루 문제에 담아 기본이론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활용하였다면, 85점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역별 출제는 지방행정론 출제가 2문제에서 1문제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 중 소청심사대상과 기관에 대한 문제는 9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관련 문제는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공된 심화강의와 법령특강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별 출제문항 분석]

	문항 수	비율
제1장 행정이론	4	20%
제2장 정책이론	4	20%
제3장 조직이론	4	20%
제4장 인사행정론	3	15%
제5장 재무행정론	3	15%
제6장 행정환류론	1	5%
제7장 지방행정론	1	5%

[출제문항 난이도 분석]

난이도	문항 수	문항번호
상	3	10, 14, 16
중	15	2, 3, 4, 5, 6, 7, 8, 9, 12, 13, 15, 17, 18, 19, 20
하	2	1, 11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③	①	①	④	②	①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①	②	③	②	③	②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회 상임위원회
- ② 행정부 관료
- ③ 이익집단
- ④ 법원

[정책이론, 하] ④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 불리는 하위정부모형은 관료, 의회, 이익집단의 견고한 연계망을 통해 정책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정책네트워크 모형 중 하나이다.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인사행정론, 중] ③

실적주의 공무원제도는 공직 임용 기준을 개인의 능력·자격·적성 등 실적에 두는 제도로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확보 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오답정리]

- ①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업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 ② 업관주의는 공직수행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 ④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업관주의의 특징이다.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행정이론, 중] ①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 대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하였다.

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행정이론, 중]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에는 공적공급, 공적유도, 공적규제가 있다.

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재무행정론, 중] ㉞ ④

영기준 예산은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집권화된 관리체계로 예산편성과정에 소수의 조직구성원만이 참여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이다.

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 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론, 중] ㉞ ②

정당은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이익 결집기능을 수행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재무행정론, 중] ㉞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에서 지출할 경비 외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이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오답정리]

- ㄷ.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ㄹ.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단년도 예산원칙(한 회계연도의 세출은 동년도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원칙)의 예외이지만, 지출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이다.

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 ②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 ③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④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책이론, 중] ㉞ ③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은 정책결과와 더불어 정책결과에 대한 과정의 적정성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목표달성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③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정책이론, 중] ㉞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이론, 상] ㉞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1항),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3항)

[오답정리]

-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2항
-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계적 능률성
- ② 공식적 조직구조
- ③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④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

[조직이론, 해] **답 ④**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 자극이 경제적 요인 자극보다 더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오답정리]

- ① 인간관계론은 기계적 능률성 대신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기계적 능률성은 고전조직이론이 강조하는 입장이다.
- ②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 자극이 비공식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식적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조직이론이다.
-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을 사회인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을 합리적·경제적 존재로 규정한 것은 고전조직이론이다.

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 ②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 ③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 ④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조직이론, 중] **답 ③**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은 협력(collaborating)에 해당한다. 타협(compromising)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적절한 수준 유지를 강조한다.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 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 ②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 ③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④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조직이론, 중] **답 ④**

제시된 내용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 구조는 이원화된 권력체계로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지만, 기존 직원이나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환류론, 상] **답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사행정론, 생] 답 ②

검사는 소청심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법부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설치되어 있다.

공무원소청심사담당기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의무·경찰·소방·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검사	소청심사제도 없음
		군	장교·준사관	국방부 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	각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별정직은 행정심판 실시)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	지방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 ① 액션러닝
- ② 역할연기
- ③ 감수성훈련
- ④ 서류합기법

[인사행정론, 중] 답 ①

액션러닝은 피훈련자들에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의 복잡한 실제 문제를 할당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학습방법이다. 피훈련자들은 문제분석부터 해결책 발견까지 각종연구와 자료수집, 토론 등을 통해 특정운영능력발전을 위한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

[오답정리]

- ② 역할연기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실제 행동으로 연기하고 연기가 끝나면 청중이 논평하는 방법이다.
- ③ 감수성훈련은 외부환경과 차단시킨 상황 속에서의 성찰과 교류를 통해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 ④ 서류합기법은 정돈없이 제공된 직무관련 서류를 피훈련자가 정리하고 중요정보를 가려내 이를 통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지방행정론, 중] 답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50%내 범위로 정책지원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한다.
-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행정이론, 중] 답 ②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개입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도가 낮다.

19.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행정론, 중] 답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① 인공지능(AI)
- ② 블록체인(block chain)
- ③ 빅데이터(big data)
- ④ 사물인터넷(IoT)

[조직이론, 중] 답 ②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은 일정시간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블록을 기존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말한다.

[오답정리]

- 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t)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분야로 문제해결 및 학습과 지식획득, 인지과학 등에 응용된다.
- ③ 빅데이터(big data)는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 등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 ④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